국제지역학석사학위논문

한국과 미국의 여성정치참여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2007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지역학과

이 정 혜

국제지역학석사학위논문

한국과 미국의 여성정치참여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방안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홍 종

이 논문을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2월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지역학과

이 정 혜

이정혜의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2월

주　　심　정치학박사　김 진 기　인

위　　원　정치학박사　이 홍 종　인

위　　원　정치학박사　황 영 주　인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

Ⅱ 여성정치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6

1. 정치참여의 개념 ····· 7

1) 정치참여의 개념 ····· 7

2)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 ····· 11

2. 여권론의 세 가지 관점 ····· 15

1) 자유주의 여권론 ····· 17

2) 사회주의 여권론 ····· 19

3) 급진주의 여권론 ····· 22

Ⅲ 미국과 한국의 여성정치참여의 배경 ····· 25

1. 미국의 여성운동과 정치참여 ····· 25

2. 한국의 여성운동과 정치참여 ····· 30

Ⅳ 미국과 한국의 여성정치참여 현황과 문제점 ····· 37

1. 미국의 여성정치참여 현황과 문제점 ····· 37

2. 한국의 여성정치참여 현황과 문제점 ····· 44

Ⅴ 여권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방안 ····· 55
1. 자유주의 여권론 ····· 55
2. 사회주의 여권론 ····· 57
3. 급진주의 여권론 ····· 58

Ⅵ 결론 ····· 60

참고문헌 ····· 65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Comparative Study on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and the U.S.

-Focusing on Activation of Korean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Junghye Lee

Department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counterplan to activate th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from the feminist theory. Generally, feminist theory is trying to change and challenge against the intention which is devaluated women's value and make against women's advantages.

This study start with the hypothesis that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would widely increase to develop democratic value and ideas, even women are out of favor in political situation. Following this point, I will survey the process and situat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women's movement in Korea and America and finally suggest counterplan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with the view of feminist theory.

To increase in Korean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we would make up for system rather than depend on gradual improvement in policies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Recently, each political parties are trying to improve the their images as developing the policy toward women concerning female voter, appointing female leader through the quota

system, but in order to increase the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they should support the women to make women play important role in political party rather than present their interest toward women.

Keywords: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Feminist Theory, Liberal Feminism, Socialist Feminism, Radical Feminis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정치는 인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치는 혐오나 거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인간에게 영향력이 크다는 반증으로 정치참여는 한 사회 구성원의 권리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그 사회의 자원 배분에서 소외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치참여의 권리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정치참여에서 제외되었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가 직접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시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고 하지만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은 자동적으로 제외되었다. 또한 프랑스혁명은 일반 시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도 여성은 배제되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정치참여라고 알아온 것들은 대부분 남성 위주의 참여였으며 여성은 포함되지 않은 설명이었다. 여성의 정치 참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처럼 정치에서 배제되어온 여성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문제는 세계 공통의 문제이라 할 수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 국가와 민족에서나 여성은 이등시민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개인중심의 고전적 자유주의나, 계급중심의 진보주의,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등 다양한 사조(思潮)를 통해서 보아도 이러한 여성의 독특한 위치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쉽

지 않은 작업이다. 기존의 사회에서 여성의 종속적 위치는 국가나 문화 환경마다 커다란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그 차이는 각 국가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이영애 1996: 359-360).

본 연구는 여성이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인식하에 민주주의 가치와 이념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폭넓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한국과 미국의 여성운동과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을 각각 살펴보고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여권론의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여권론[1]의 관점에서 찾는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구를 위해 본 논문은 주로 문헌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한 서술적 접근방법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여성정치참여에 관한 1차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돕기 위하여 2차 자료로서 관련문헌을 사용하였다. 1차 자료들은 여성부 및 국회 가족여성위원회가 발간한 정책자료, 의원 및 정부발의 법안자료, 각종 여성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하였으며 2차 자료들은 여성의 정치참여연구를 다룬 단행본, 학위논문, 연구논문, 학술지 논문 등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자료와 문헌을 통하여 본 논문은 미국의 여성정치참여와 한국의 여성정치참여를 비교연구하

1) 일반적으로 여권론(feminist theory)이란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여성의 가치를 평가절하 시키는 현상유지적인 생각들에 도전하거나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기여하는 여러 관점을 총칭한다고 본다(여성한국사회연구소 1999: 22).

여 여성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기술하였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논의로 민주주의와 여성의 정치참여, 정책결정과정과 여성의 정치행태에 대해 살펴본 후 여성의 정치참여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여권론의 대표적인 세 가지 이론인 자유주의, 진보주의, 급진주의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배경을 여성운동과 연결 지어 각각 살펴보고 4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여성 정치참여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5장에서는 여권론의 시각에서 바라 본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목적인 여권론의 시각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을 요약정리한 후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논문이 지니는 의의 및 한계점에 대해 지적하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논문은 다양하게 발표되었다. 대체적으로 일반 정치학의 시각으로 분석하여 다룬 논문이 많았으며 여권론의 관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다룬 논문은 없었다.

한국의 여성정치 참여에 관한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정당 및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들이다. 김옥렬(1993), 이범준(1998), 이영애(1998), 박채복(2002)은 정당의 공천과정이나 선거제도 등을 여성의 과소대표성의 직접적인 요인으

로 규정하고, 제도적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의 높은 정치의식과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진출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현실은 기존 정당이 여성을 공천하지 않고 선거구제도와 선거자금법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 연구들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정당 공천에 성별할당제의 도입과 선거와 선거구 제도에 있어 비례대표제 방식과 중 · 대선거구제의 도입 등의 제도적인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여성의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들이다. 송은희(1996), 주준희(1997), 현종민(1998), 전정희(2001), 조현옥(2003)은 한국여성의 정치, 사회참여 실태가 전 세계적으로 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경시하는 사회 · 문화적인 풍토에서 찾음으로써 정치문화 및 사회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세 번째는 여성후보자와 관련한 연구들이다. 손봉숙(1991), 조기숙(1995), 박의경(2000), 황아란(2002)은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의 개인적 배경(연령, 학력, 직업)과 선거운동 방식(출마동기, 선거운동 조직 및 방법)등을 연구하였고, 백영옥(1998), 김영란(2004), 이해주(2000), 전경옥(2003)은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된 여성정책 및 여성의원들의 정책 선호도, 의정활동의 전개방식 등을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어떤 요인들이 당락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네 번째는 여성유권자의 선거참여에 관한 연구들이다. 김원홍(2003), 엄태석(2002), 김효미(1994), 이기옥(2000)은 여성유권자의 투표행태, 성차연구, 의식 등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다룬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여성의 낮은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는 ①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경시하는 정치 · 사회문화와 더불어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성 고정관념 ②고비용

의 정치구조 ③여성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 ④여성의 정치참여를 지원해 주지 않는 정당구조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성의 정치참여가 활성화 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상기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자유주의, 진보주의, 급진주의 등 여권론의 관점에 의해서 연구된 논문은 없고 한국과 미국을 직접적으로 비교연구한 논문도 없다. 여성의 정치참여를 여권론에 의해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한국에 비해 여성의 정치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비교하는 것도 학문적인 의의가 있다고 사려 된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Ⅱ 여성정치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의 선출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정치제도의 정통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남성에 의한 남성위주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구태효 2006: 4). 여성의 정치적 저(低)대표성은 평등사상과 기회균등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간존중이라는 민주주의 이념에도 상반되는 인권문제이기도 하다(이범준외 1998: 25). 여성의 대표성은 정치제도의 정통성 구현과 대의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채택된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치의 영역이 확대되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정치가 보편화 되었다. 생활정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교육, 사회복지, 환경 등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여성들의 시각이나 판단력이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중심의 부정적인 정치관행이나 정치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성의 정치참여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또한 수적으로 균형이 맞는 남녀간의 대표성이 보장된다면, 정치지망생의 양적·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여성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관심분야까지 정치체계에 투입되어 정치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은 여성 정치가를 배출하는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참여 의식의 개선과 민주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지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1. 정치참여의 개념

1) 정치참여의 개념

정치에 대한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실제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 있어서 정치라는 것은 폴리스의 공동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 정치학의 관심은 기본적으로 윤리학적 입장에서 인간의 선(善)의 실현과 철학적인 입장에서 이상적인 국가 건설에 있었다. 그리고 로마시대에 있어서는 정치는 범세계적인 인간관과 혼합적이며 법적인 성격을 띠었다. 중세에는 국가의 지위보다 교회가 우월하였기 때문에 정치학·철학 모두가 신학의 일부로 존재했다(이범준·신승권 1996: 2-6). 16~18세기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 있어 가장 필요했던 것은 권력질서였다. 당시의 정치란 권력질서로서, 특히 마키아벨리와 홉스에 의해서 권력질서가 강조되었다. 19세기는 정치란 국가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는 법률주의적 국가관과 정치를 정치제도로 규명하려던 시기였다. 20세기 대중사회에 있어서 정치의 범주는 국가에서 사회로, 제도에서 과정으로, 그 관심사가 변화되었다. 즉, 20세기를 기점으로 정치학의 범주는 과거의 국가 · 법률 · 제도에 관한 정태적 연구대상에서, 정치를 개인과 집단의 활동 · 행위 · 기능으로 해석하는 동태적 정치과정이 주요 연구대상으로 부상된 것이다. 아울러 정치를 오직 국가 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기타의 모든 집단이나 사회영역에 있어서 '권력의 형성과 분배의 행사'의 문제로 보려는 견해도 생기게 되었다(이극찬 1999: 81-82).

이러한 정치학의 범주의 변화로 정치참여에 대한 여러 견해가 나오게 되었다. 정치참여의 개념은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정치참여의 의미는

정치체계의 성격과 참여 행동의 분류자원에 따라 혹은 정치문화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Sidney Verba와 Norman H. Nie는 정치참여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행위로서 정치지도자나 시민들이 직접 또는 간접의 수단을 동원하여 그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하는 합리적인 태도라고 정의하였다(Sidney Verba & Norman H. Nie 1972: 2).

L. W. Milbrath는 정치참여는 정치성원들이 상호간에 교차적인 연관을 통하여 서로가 공존하기 위해 선택, 표명하게 되는 정치구성원들의 행동으로 보았다(Lester Milbrath 1965: 1).

S. P. Huntington과 J. M. Nelson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일반 시민들의 활동, 즉 자율적 참여와 동원된 참여 모두를 정치참여(S. P. Huntington and J. M. Nelson 1977: 5)로 보는 포괄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G. A. Almond의 분류에 따르면, "인습적인 정치행위"와 "비인습적인 정치참여"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투표와 같은 정상적인 형태의 참여를 의미하며 후자는 데모 등과 같은 비합법적, 폭력적, 혁명적 행위를 말한다(최명 1981: 156-157).

신명순교수는 전통적·인습적 정치참여 유형을 상례적이라고 일컬으며, 상례적 정치참여의 유형으로 정치에 미친 영향력의 중요도에 따라 1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가장 소극적인 참여 방법으로부터 가장 적극적인 참여방법의 순서로 분류해보면, ①정치에 관한 정보획득, ②투표참가, ③정치에 관한 토론 주도, ④특정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타인에게 권유, ⑤이익집단에 가입, ⑥특정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표지부착, ⑦정치인 또는 정부관리를 접촉·면담, ⑧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정치헌금, ⑨정치집회 참석, ⑩선거운동에 시간제공, ⑪선거운동에 능동적이고 활발한 역

할담당, ⑫정당의 간부회의 참석, ⑬정치자금의 모금주도, ⑭공직선거에 입후보, ⑮정치적 직책의 획득 등이다(신명순 1993: 294). 정치 참여방법에서는 남녀간의 큰 차이가 없으나 가장 적극적인 형태인 '정치적 직책의 획득'에서는 여성이 충분하게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참여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정의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정치사회의 구성원에 의한 의사반영을 위한 활동'을 정치참여라 정의하기로 한다. 정치사회의 구성원은 다양한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치참여는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행위, 정당활동에 참가하여 직접정치에 가담, 일반 시민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하여 정치사회화에 기여하는 개인의 정치참여, 즉 자유의지의 집합적인 표현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정치참여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개개인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오늘날 정치참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가 바로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것이다. 정치학에서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입장을 살펴보면, 여성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권력과 지배계층에 상대적으로 참여가 낮은 것은 그 원인이 여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 안에 있으며,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이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다는 것이다.

여성의 교육수준도 향상되었고 정치적인 자원들도 풍부해진 오늘날에도 여전히 모든 조직들로부터 여성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민주주의와 사회형평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정치적인 해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루소가 주장한 것과 같이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정치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국가 내에 거대 인구가 존재하는 한 실현이 불가능하기에 차선책으로 의회정치나 지방자치제를 통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대의민주

제하에서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대표를 선출하는 유권자로서 참여하는 방법, 대표로서의 대통령 · 국회의원 · 지방의원 ·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참여하는 방법, 권력기관에 압력을 행사하는 이익집단에의 참여 즉, 시민운동가로 참여하는 방법의 세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 역대의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유권자들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의 순으로 관심이 많았다. 또한 여성선거권자의 수가 남성선거권자의 수보다 약간 많지만, 투표율에 있어서는 남성투표율이 여성투표율에 비해 약간 높았다. 그리고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있어 남녀유권자들은 정당의 정책이나 공약보다는 후보자의 경력이나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는 각 선거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며, 남녀간의 성차도 찾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투표를 자신의 권리로 인식한 것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 이후의 일이다. 특히, 대통령선거가 직접선거로 전환되면서 정당들이 여성유권자들의 표를 인식하고, 여성단체들이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할당제 모임'을 결성하면서부터일 것이다(김원홍 2003: 37-38).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은 여성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헌법전문(남녀동등한 정치참여 기회 균등), 제11조 1항(성별·종교 도는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금지), 제24조와 제25조(남녀 동등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부여)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국가기관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여성의 공무담임권은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선거법과 각종 공무원법에 명시되어있다.

여성단체는 압력단체로서의 활동을 통하여 국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여성정치력의 형성을 위한 조직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여성의 정치사회화와 정치세력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세력화를 위해 두 가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 정부 및 정당에서 약속한 정책이나 공약의 실행 여부에 대한 감시 · 감독 강화, 여성정책 연구, 여성후보(지도자)발굴 · 육성 및 국회여성특위와 대통령직속여성특위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여성단체의 압력단체로서의 역할 및 기능에 포함되는 활동들이다. 둘째,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론형성을 통한 담론화가 여성단체의 중요한 기능 및 역할이다. 이를 위해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여성유권자 의식교육, 남녀평등의식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신영숙 1993: 451).

2)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

여성의 정계 진출과 정치참여는 20세기 후반 사회변동의 주요 특징의 하나이다. 1997년에 있었던 아일랜드 대통령선거에서 두 번 연속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는 등 북유럽의 국가들에서 여성의 정치적 진출은 더욱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여성의 정치적 진출이 매우 드문 일로 나타나는 나라가 훨씬 많고,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여성들의 정치적 진출은 아직도 소수에 그치고 있다.

현대의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는 선거민과 대표자간의 의사의 간격을 좁혀야 하며, 남성 시각중심의 정책결정에 문제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은 여성정치가를 선출하는 문

제뿐 아니라, 민주사회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여성해방론의 초기단계에서 사회참여를 시도한 여성들은 양성통합론을 주장하며 남성성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에게 여성해방은 남성과 똑같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은 남성과 다르며 그 차이점이 핸디캡이 아니라 특화된 자질로서 발휘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성정치가는 여성으로서, 남성이 할 수 없는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Ellen Kay의 '모성존중론'에 따르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며 양육하는 모성은 여성 고유의 것이며 열등한 것도 극복되어야 할 것도 아니다(박순자 2003: 20). 이것은 남성성의 부정부패 · 권력 갈등 · 지배와 통제 · 권위에 대해, 도덕성 · 협력과 공존 · 보살핌과 나눔이라는 여성성의 우수한 자질이 정치에 반영될 때 기존의 정치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여성 경제활동 가능인구 중 약 48%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3%에 이르고 있다. 여성의 법적 지위면에서도 가족법 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마련으로 괄목할 만한 제도적 개선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여성교육 및 취업률의 증가, 법적 지위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대부분은 단순반복적인 생산직,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고, 임금은 남성 근로자의 55.7%에 불과하며, 승진차별을 비롯한 다양한 고용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가 곧 여성의 지위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해 준다(김미란 1996:11).

한국사회에서의 정치는 공적 서비스의 제공이란 측면보다 권력유지의 한 수단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며, 전통적인 유교의 영향으로 정치를 남성의 독점적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원화되고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대표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참여 특히 여성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살펴보면, 민주주의 이상과는 거리가 먼 모습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인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구성원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은 첫째, 여성의 교육수준향상과 그로 인한 여성의 복지요구 증대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과 함께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신장되었다. 성별 취학률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남녀간의 격차는 거의 발견 할 수 없다. 그리고 대졸이상의 학위취득자의 경우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80.8%, 학위취득자의 여성비율은 석사 43.0%, 박사 26.0%이다. 학력수준이 신장하면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참여율은 50.6%에 이른다(통계청 2006). 앞으로의 여성운동은 여성의 정치참여가 중요성을 띠면서 여성이 주체가 되는 인간화운동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동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 참여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김혜영외 2001).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점이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우리의 관심분야는 지역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개발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문제, 환경 문제의 해결 및

문화적 욕구충족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사명감, 봉사정신과 함께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은 주민자치이다. 지역주민 각계각층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들의 대표가 골고루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특성상 여성특유의 통찰력, 전문지식, 섬세함, 근면성실 등이 요구되는 일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지방자치단체 참여는 독려 되어져야 한다.

셋째, 여성의 정치참여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1975년 UN이 '세계여성의 해'를 정하고 76년~ 85년까지를 '유엔여성 10년'으로 선포한 이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분배의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결정과정에 1995년까지 30%이상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여성의 의회 정치참여 수준은 세계 각국과 비교해 볼 때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전 세계 여성의원의 비율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경옥 2003: 13-15).

넷째, 여성의 높은 도덕심을 들 수 있다. 2001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간한 정책보고서[2]에 의하면 정치 및 공공분야에서 여성의 부패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도덕관념이 대체로 높고 위험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이다. 산업화사회에서는 재화생산을 노동력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지식산업과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재화의 생산은 기존의 노동력에서 탈피하여 두뇌에 의존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다양한 지식 · 정보사회에서 여성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

2) 권리, 자원 목소리의 성평등을 통한 개발의 성 인지화(Engendering Development through Gender Equality in Right, Resources and Voice)'

고 그것이 여성의 사회참여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정보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정보와 지식 중심의 사회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리적 · 신체적 측면에서 남성과 동등한 조건에서 노동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리 할 수밖에 없었던 산업사회와는 달리 지식 · 정보화 사회는 정적이고 사변적(思辨的)인 여성에게 훨씬 긍정적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강하고 권위적인 남성에 반해 여성은 따뜻하고 친밀하며 인간성이 풍부하다. 남성의 특성이 근대산업사회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면, 미래사회에서 효율적이고 과감한 여성인력정책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여성과 같이 중요한 사회집단을 더 공정하게 대표시키는 것은 정부에게 보다 많은 정통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보다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과거에 소외되어 왔던 집단에게 그들의 이해가 반영될 것을 약속해 주고 사회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자원을 적극 활용하여야만 국가와 사회가 투자한 가치를 거두어들이는 것이며, 또한 다음 세대의 여성들에게도 자극을 주어 자신의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2. 여권론의 세 가지 관점

일반적으로 여권론(feminist theory)이란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여성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현상유지적인 생각들에 도전하거나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기여하는 여러 관점을 총칭한다고 본다(여성한국사

회연구소 1999: 23). 여권론의 관점에서는 젠더(Gender, 性)가 이론의 초점이 되어서 기존의 여성과 남성간의 사회적 관계가 문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여성한국사회연구소 1999: 22).

페미니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여성에 관한 인권이나 자각은 서구사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여성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여성운동은 여성도 교육을 받으면 남성과 동등해 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교육의 혜택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자 했던 18세기 후반의 제1기 여성운동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의 제2기 여성운동을 거쳐 1970년대 이후에는 1975년의 세계여성대회 등을 대표적 상징으로 하는 세계적 차원의 여성권리 확대운동에 의해 가속화되었다.

제1기 여성운동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던 시기였다. “남자는 51%의 남성호르몬과 49%의 여성호르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자는 51%의 여성호르몬과 49%의 남성호르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식의 주장은 남녀차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으며, 이는 제1기 여성운동의 페미니즘이 지닌 특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1기 여성운동은 여성의 참정권을 제기한 1840년에 시작하여 모든 여성에게 참정권이 인정된 1920년까지이다. 이 시기의 여성운동은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이 제도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참정권을 비롯하여 여성의 법적 동등권을 주장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시기의 미국의 여성주의는 여성보다 더 소외된 인간인 노예해방에서 자극을 받으면서 활성화 되었다. 제1기 여성운동은 투표권, 가족수당, 피임, 낙태, 복지권리, 임신수당 등 다양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회적 전반에 걸친 문제를 법적으로 제시하고 생산 활동에 관심을 가졌다. 제1기 여성운동이 선거권 획득을 쟁취 했을 때 페미니스트들은 성차별에 대한 법적동등권이라는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는 여전히 관습적 · 도덕적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었다.

제2기 여성운동 시민평등권을 주장하는 제1기와 연결되며 미국과 영국의 페미니스트들이 주도하였다. 1968년 New Left 급진주의로부터 분리된 이 여성주의자들은 법적인 이면에 있는 가부장제 이념이 사회 도처에 있어 여성의 불평등과 차별을 조장한다고 생각하고 문화적 차별을 주는 성차별을 해체시키고자 하였다. 그들은 모든 사회가 남성 중심적이며 여성은 계급, 생산에서 소외계층임을 지적하고 “The Personal is Political”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의 물결의 교육 · 법적 · 경제적 동등권 추구와 함께 여성의 재생산(Reproduction), 차이(Difference), 경험(Experience)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여성은 남성과 다르다는 여성의 관점을 주장했다. 더 이상 남성과 동등해지고자 하지 않고 여성의 여성성을 장점으로 보는 것에서 제2의 여성운동이 시작된다. 이와 같은 제1 · 제2기의 여성운동은 백인 중류계급의 교육받은 여성들을 기반으로 한 자유주의 여권론, 사회주의 여권론, 급진주의 여권론으로 발전되었다. 여권론의 관점에서 본 여성의 정치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여권론의 가장 대표적인 위의 세 가지 관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자유주의 여권론

자유주의 여권론은 제2기 여성운동의 시작이다. 자유주의 여권론은 현대 페미니즘의 가장 전통적인 이론으로서 이들은 사회에서 개인이 그들의 자율성을 행사하고 그들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도록 허용한다는 자유주의 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자유주의 여권론의 기원은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여성운동이 투쟁의 형태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부터이다. 여권론의 성장은 서유럽과 미국의 지적발달에 깊이 관련이 있으며, 영국의 Mary Wollstonecraft, John Stuart Mill 등 18세기와 19세기 사상가들이 근대 여권론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인간의 타고난 신분에 따른 모든 인위적인 제약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계몽사상은 자유주의 사상과 융합되어 자유주의 여권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Wollstonecraft는 1792년에 『여성권리의 옹호』라는 책자를 통해서 남성에게 종속된 상태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이성 능력을 발휘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자신 속에 내재해 있는 합리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tuart Mill은 자신의 저서 『여성의 예속』에서 여성에게만 자유주의적 관행이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성도 남성과 같은 법적 권리와 동등한 교육기회, 참정권의 획득, 직업기회를 가짐으로써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여성한국사회연구소 1999: 26).

자유주의 여권론은 공공정책을 통하여 여성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부각시키면서, 사회제도와 법의 개혁을 주장한다. 이들은 생물학적 속성으로 인해 여성들이 주어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는 보수주의적 관점을 배격하고 있다. 공중을 재교육시킴으로써 보다 해방되고 동등한 남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어 성역할의 재사회화과정에 주력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교육과 직업의 균등한 기회보장으로 공적 부문에서의 남녀 차별이 줄어들 때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노예제도 폐지운동과 함께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운동을 동시에 펼쳐나가기도 하였다.

자유주의 여권론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양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와 사회 및 정치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

다.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들의 입장은 사실상 부르조아식의 자유로운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또한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서구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이 관점에서는 특정 집단에 속한 이들은 자율성을 성취할 수 있는 동기나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에 반해서 다른 집단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구조상의 불평등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들이 동등해져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짓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에서의 계급과 인종을 둘러싼 다양한 집단간의 위계질서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으면서, 단지 더 많은 여성들이 기존의 정치 및 경제제도에 흡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자유주의 여권론의 입장에서는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며, 기존의 제도 자체가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유주의 여권이 사회구조보다는 제도나 관행을 바꾸는 데 주력하기 때문에 개량주의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 여권론이 한계점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장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여성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 많은 교육적, 법적 개혁을 공으로 돌릴 수 있다. 그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여성들이 새로 찾아낸 전문적 직업상의 진전을 성취할 수 있었을 지가 의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들도 결코 사소하게 취급되거나 단지 과거의 업적으로만 기념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여성들이 교육적, 법적, 전문적 직업상의 이익이 완전히 확보하기까지 자유주의 여권론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2) 사회주의 여권론

자유주의 여권론과 달리 사회주의 여권론에서는 젠더의 특성이 사회·경제 및 정치적 범주 내에서 어떻게 발달되고 지속되어 왔는지를 설명한다. 이들은 기존의 사회제도에 여성들을 점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을 찾는 자유주의 여권론자들의 입장과는 달리, 주어진 제도가 여성 억압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 사회주의 여권론은 여성억압의 기원을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서 찾는 보다 급진적인 관점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의 사회주의 여권론의 출현은 여성과 가족에 대한 전통적 맑스주의자들의 관점에 불만을 가진 여권론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통적 맑스주의자들은 남성의 자산과 이윤축적을 위해 여성노동의 착취를 불가피하게 한 자본주의제도를 여성억압의 주된 원인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여권론자들은 여성억압은 자본주의 이전 단계에서나 비자본주의 사회체제에서도 계속 있어왔다는 데 주목하면서, 여성의 지위를 자본주의제도에만 국한시켜서 보는 전통적 맑스주의자들을 비판한다. 맑스와 엥겔스는 성적 노동분업의 가장 최초 형태가 계급 적대감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여권론자들은 자본주의제도가 여성의 억압을 창출하는 데는 가부장제와의 상호연관성이 크게 작용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규정된 성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생산 또는 재생산되며 계급관계와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이들의 주된 목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과 젠더간의 상호관련성을 살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itchell은 『여성의 지위』에서 고도 산업사회에서의 여성 지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Mitchell은 맑스와 엥겔스의 주장대로 경제적 생산양식이 중요함은 인정하면서도 여성해방문제가 그들에게는 단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를 뿐이어서 구체적 차원에서 설명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맑스와 엥겔스는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전환될 때 여성해방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Mitchell은 이러한 사회제도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성억압에 관한 구체적인 이론이 나와서 과연 어떻게 전환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Mitchell은 비록 생산에 있어서의 여성역할이 여성억압에 중요하게 작용해 왔지만 이러한 경제적 생산양식과 함께 재생산, sexuality, 어린이의 사회화에 있어서의 여성역할 등이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관련되어 왔다는 매우 포괄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Mitchell의 이론은 특히 가정과 경제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이후에 여권론자들이 이 두 영역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여성의 지위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Mitchell은 여성들이 공공산업에 뛰어들어서 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때 여성해방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노동참여에서 배제된 것이 가장 주된 여성 억압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여성억압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에 따른 노동 분화가 없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여성한국사회연구소 1999: 28-29)

Mitchell과 마찬가지로 Zaretsky도 자본주의 고도로 발전되면서 가족에서의 생산기반이 없어지므로 여성은 가정에 남아서 사적인 생활에서 주된 책임을 맡게 되었다고 본다(여성한국사회연구소 1999: 29-30). 하지만 그는 개인의 사적 생활이 공적 영역으로부터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자체가 허위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는 여권의 확립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제거뿐만 아니라 가족과 개인생활에 있어서의 변천까지도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이들 사회주의 여권론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관계에서의 전환이 있고 또한 가족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될 때에 여성의 지위가 변한다고 전망한다.

3) 급진주의 여권론

급진적 여권론도 사회주의 여권론과 마찬가지로 성차별이 사회제도 내에서 체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관점에서는 가부장제를 여성억압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삼고 있는 점이 사회주의 여권론과의 차이점이다. 급진적 여권론자들은 남성이 우세한 힘과 경제적 특권을 지니는 권력체계로 가부장제를 정의하고 있다. 사회주의 여권론이 젠더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데 반해 급진적 여권론에서는 남성의 힘과 권력 및 심리적 발달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계급관계보다는 가부장제에 기반을 둔 젠더관계가 더 근본적임을 시사한다.

이들은 여성의 지위가 역사적으로 변천해 왔으며, 적어도 수렵 · 채집사회는 지금에 비해 훨씬 평등한 사회였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한 여성이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 착안해서 젠더관계란 사회별 · 역사적 시기별로 달라져 왔음을 인류학자들의 연구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 급진적 여권론자들은 남성의 여성통제는 단순히 계급억압으로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급만으로는 문화적으로 다양한 억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의 주장대로 급진적 여권론의 입장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과 여성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도록 발달되어 온 많은 문화적 관습을 사실상 잘 설명할 수 있다.

Shulamith Firestone은 여성억압의 주된 원인을 여성의 출산기능으로

들고 있다. 여자만이 출산 가능하다는 신체적 이유 때문에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맑스와 엥겔스처럼 경제관계에만 전적으로 매달려 여성의 지위를 분석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성의 변증법」을 통해 여성의 성적 불평등 제거를 위해 재생산수단을 통제할 것을 주장한다. 기술혁신으로 인공임신이 가능해져서 여자만 애를 낳고 키우는 성차별적인 제도적 관습이 제거될 때에 남녀평등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Firestone의 이론은 여성에게 부여된 재생산역할의 중요성을 거부한 최초의 이론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여성한국사회연구소 1999: 30-31).

Jerry Rubin과 같은 급진적 여권론자들은 여성억압의 원인이 남성의 유대를 공고하게 하는 사회제도 있다고 본다. 특히 친족제도가 개인들을 사회적 범주에 관련시킴으로써 성체계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한다. 즉, 사회화과정을 거치면서 각 개인은 친족체계가 조직되어진 대로 성적 범주를 따르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남성은 여성을 지배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생물학적 성과 문화적 성 체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가 일어날 수 있는 전제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은 셈이다. 급진적 여권론자들은 남성우월주의 제도가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중심의 세상에서 살도록 강요하는 신화를 창조해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여성중심의 신념과 제도를 확립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남성중심문화에서 탈피하는 방법으로 여성들의 동성애를 주장하는 입장도 이러한 급진적 여권론에서 그 이론적 맥락을 찾아 볼 수 있다(여성한국사회연구소 1999: 31).

Catherine Mackinnon은 남성지배의 단면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의 통제를 들고 있다. Mackinnon은 여권론에 있어서 성이란 맑스주의자에게 있어서의 일(Work)과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여성

과 남성은 성의 표출에 있어서 사회화과정 동안에 다르게 경험하게 되므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성적인 존재로서도 자신들을 인식하게 된다. 성은 남성 권력의 일차적 영역이며 강간, 성적 희롱,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 등을 통해 남성은 여성에게 성적 권력을 행사한다. 이와 같이 이성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남성의 권력이 표출되므로 이성간의 성관계만을 인정하는 것은 남성지배를 제도화하는 길이며, 남성의 여성성에 대한 통제가 바로 성 불평등의 근원이 된다고 본다.

또한 성에 있어서 남성 지배를 제도화하는 데는 국가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국가가 성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남성의 편에 서왔는데, 이는 남성에 의해서 자주 저질러지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온 점 등을 증거로 들 수 있다고 한다. 이 입장에서는 국가가 종래의 남성중심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여성들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중개자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한다.

Ⅲ 미국과 한국의 여성정치참여의 배경

1. 미국의 여성운동과 정치참여

미국 독립전쟁 당시,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편이나 자식이 징병되었을 겨우 생계가 막연하였기 때문에 군대를 따라 다녔고, 매우 빈곤하고 험한 생활을 하며 군대에 공헌하였다. 종전 후에는 남성들만의 새로운 정치문화 및 이념에 따라 공화국이 창립되었고, 참정권과 재산권도 백인남성에게만 귀속되어 미합중국은 제한민주정의 도습으로 역사의 첫 발을 내딛었다(이영애 1996: 113).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쟁이 끝나면 그들의 참정권도 헌법으로 보장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1865년과 1870년 개정 된 14, 15조 수정헌법은 흑인남성의 참정권을 보장해 줄 뿐이었다. 미국여성들은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정치적 판단이 감정적이고 신뢰할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기득권층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즉,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함으로써 “당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이영애 1996: 114). 이를테면 남부지방의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는 흑인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지고 백인 여성에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고, 대도시의 정치보스들에게는 여성지지표가 그들에게 몰릴 경우의 선거결과에 대해 상상하게 만들었다. 또한 여성이 참정권을 갖게 된다 해도 특별히 거세어진다거나, 정치적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남성들을 설득하였다. 여성의 참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동의 및 지지가 필수적이었으므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남성에게 저해요소로 등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득이 되는 편이 많다는 점을 설득하려 하였다. 미국여성들의 초기 정치참여는 사회의 보수적 물결을 거스르지 않는 가운데 조용하게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1920년 수정헌법 17조의 개정에 따라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었다.

초기 여성조직은 활발히 움직였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들로 전국여성참정권협회(The National Woman Suffrage Association)를 계승한 여성유권자연맹(The League of Women Voters), 전국여성경영자전문인협회(The National Federation of Business and Professional Women), 미국대학여성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등이 있었다(이영애 1991: 371-399).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낙태법안, 남녀고용평등, 사회복지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여성조직은 점차 그 세력과 조직을 확산시켜 나갔다. 전국적으로 자금과 인원을 모집하고 여성로비세력을 구축한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후보자를 선정하여 선거캠페인을 벌이고, 법안을 초안하며, 입법심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로비스트를 고용하였다. 여성문제를 위한 의회코커스(Congressional Caucus for Women's Issues)[3]를 중심으로 의회내의 입법활동을 조직화하며, 여성들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였다. 1970년대 초기엔 전국여성정치코커스(The National Women's Political Caucus), 전국여성교육자금(The National Women's Education Fund), 전국여성정치자금(The National Women's Campaign Fund)등이 창설되었고, 1984년에는 전국과 지역수준을 통틀어 여성들을 위한 정치활동위

3) 이 조직은 1977년 의회내에서 '여성의원들의 코커스'라는 명칭으로 처음 발족되었다. 1981년부터 남성의원들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하였고, 현재 120여명의 남성의원들이 동참하고 있다. Sara E. Rix, The American Woman (N.Y., West, 1994) 참조.

원회(PACs)는 20여개에 이르렀다. 1980년대에는 주와 지역에서 여성정치인들의 수가 급증하여, 1971년 4.8%의 기록을 보이던 주의회 여성점유율은 1991년 18%까지 늘어났다. 인구 30,000명이상의 시를 관장하는 여성시장의 비율도 1971년 1%에서 1991년 17%로 증가하였다(이영애 1996: 120).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양대 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의 시각차이다. 공화당은 성 차에 따른 특별한 이익도, 불이익도 없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을 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소외계층들의 역사적 불이익을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여성에게 특별한 처우를 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복지적 페미니즘을 추구하고 있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극우보수정책 아래 공화당의 정책노선은 거의 반(反)페미니즘을 취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많은 수의 대의원을 여성으로 추대하는 대안을 마련하였다. 1984년 공화당 전당대회때 48%의 대의원이 여성이었으며, 주요 발언자 중 3분의 1이 여성이었다. 기존의 남성대의원들은 당 중앙으로부터 자진사퇴할 것을 권유 당하였다. 이는 1988년 전당대회의 여성대의원 비율 35%와 충분히 대비될만한 기록이었다. 1992년 전당대회에는 여성들의 반발로 다시 43%의 대의원 비율로 회복되었다.

공화당의 이러한 양면작전은 대통령 연임조차 실패한 1992년 대선참패의 한 원인이 되었다. 1992년 의원선거에서도,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여성은 37명으로, 민주당 후보인 71명의 52%에 불과했다. 공화당소속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여성은 Texas의 Kay Bailey Hutchison으로 기존의 Kansas의 Nancy Kassebaum과 함께 2석을 차지하고, 민주당소속 상원의원으로는 4명(California의 Dianne Feinstein과 Barbara Boxer, Illinois의 Carol Moseley Braun, Washington의 Patty Murray)이 당선되어 기존의 Barbara A. Mikulski(Maryland)와 함께 5석을 차지하였다.

공화당소속 여성하원의원은 12명, 민주당 소속 여성하원의원은 36명이었다. 양당의 여성후보자 당선율은 공화당 38%, 민주당 55%였다.

민주당의 경우, 1970년대 초기부터 가장 강력한 페미니즘 운동단체인 전국여성조직(NOW:National Organization of Women)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1976년 채택한 정강에 따라 대의원수의 절반을 여성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1970년 전당대회의 여성대의원 약 20%는 전국여성조직의 핵심멤버가 차지하여, 민주당 대의원회는 여성운동가들에 의해 장악되었다. 1988년 정강이 수정되어 여성운동가들의 반대세력이 점차 커지자, 전국여성조직의 회장인 Molly Yard는 여성정당을 창당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실상 그녀가 민주당으로부터 탈당하여 실제로 정당을 만들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나, 1989년 전국여성조직의 총회에서 "21세기 권리장전(Expanded Bill of Rights for the 21st Century)"을 바탕으로한 제3의 정당설립에 관해 연구할 것을 의제로 상정하였다(Johanna Brenner 1993). 1992년 총회에서 "21세기 정당-전국평등당"이라고 명명된 새로운 정당의 설립움직임은 하나의 태풍의 눈으로 작용하는듯 하였으며, 민주당의 틀을 깨고 나오지 않은 전국여성조직은 민주당의 여성정책을 더욱 진보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1992년 캠페인에서 민주당내의 하부조직인 Emily's List[4]가

4) Early Money Is Like Yeast. 1986년 25명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민주당 후보들을 위해 돈을 기부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모였다. 이들은 후보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들이 자신이 선택한 여성 후보들에게 직접 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부자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이후 에밀리리스트는 미국의 경우 상원, 하원, 그리고 주지사 선거 및 예비선거에서 여성 후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왔다. 이 재정적 지원은 특정 재단이나 기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며,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수만 명의 여성 유권자들을 후원자로 조직하여 이루어진다. 여성유권자 개인으로 하여금 그들이 후원하고 싶은 여성 후보 2명을 선정하여 후원한다. 후원에 참여하는 여성유권자 1인당 평균 후원 금액은 95달러 정도. '여성의 해'라고 불리던 1992년에 에밀리리스트는 4명의 새로운 pro-choice(낙태권리 인정) 민주당 상원의원과 20명의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는 데 일조했다. 에밀리리스트가 시작된 이후 아홉 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그동안 에밀리리스트는 11명의 여성 상원의원과 55명의 하원의원, 7명의 주지사를 당선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회원 수는 600% 이상 증가했고, 2만 3천명의 회원들이 후보자들에게 6백2십만달러가 넘는 돈을 기부했다. 에밀리리스트는 의회 진

민주당소속 여성출마자들의 선거를 돕기 위해 모금한 액수는 6백만달러에 달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들로부터 주로 성금을 받는 정치활동위원회(PACs)는 총 47개이며, 전국조직은 11개에 달한다(이영애 1996: 124). 31개의 주 및 지방조직 중 4개는 유색인종여성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2년 한 해 동안 여성들을 위한 정치활동위원회가 모금한 액수는 1180만달러에 이르렀으며 이중 약 98%의 자금을 여성후보자들을 위하여 기탁하였다.

특히 1992년 선거에서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뚜렷한 신장세를 보였다. 상당수의 현직자들이 은퇴하였고, 새로운 정치인들에 대한 기대가 요구되었으며, 선거구가 재조정되었고, 이전에 소극적이던 여성들이 선거자금조달과 캠페인협조에 적극 나서 여성의원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에서 108명의 여성후보가 출마하여 기존의석에 19석을 더한 48명이 하원의석을 차지하였으며, 5명이 상원에 당선되어 전체 상원의원석을 2석에서 7석으로 증가시켰다. 출마자도 당선자도 모두 민주당이 수적우위를 점한 1992년 선거는 정당의 강령으로 여성지지를 표방하여 정책대결의 구도로 몰고 간 민주당의 압승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미국여성들은 독립혁명 후 줄곧 기존의 체제와 질서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점차 정치권 참여를 확산시켜왔다.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쟁을 선택하는 태신 설득작전을 폈으며, 그 이후 줄곧 기존 정당의 하부에서 상부조직에 이르기까지 점증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다.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두드러졌으며, 선거자금 모

출을 추구하는 여성들을 위한 가장 큰 재정적인 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에밀리리스트가 지원한 여성의 3분의 1에 가까운 숫자가 유색 인종 여성이다.

금방법의 일환으로 정치활동위원회를 저극 활용 하는 등 점차 조직과 세력을 넓혀왔다. 기존의 세력기반을 바탕으로 여성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전국여성조직의 의도는 민주당의 정책노선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점증주의적 접근은 다른 국가의 여성정치운동에 하나의 모델로 적용될 수도 있다.

2. 한국의 여성운동과 정치참여

한국여성의 참정권은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 헌법과 각종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다.[5] 1948년 최초의 선거에서 이미 남녀 보통 선거권이 부여되었고, 정치상 아무런 제한 없이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었다. 이로써 현행법 규정은 여성도 한 국민으로서 정치적·공적 생활영역에서 균등한 생활을 하면서 성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남녀평등권을 구현하고 있다. 헌법제정의 기본이념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민법규정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법규에는 조선시대 남존여비사상의 잔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저변에 흐르는 정치·사회·문화적 요소는 끊임없이 여성들을 제약하고 있다.

한국여성의 정치·사회적 참여 실태가 저조한 것과 관련해 혹자는 한국여성의 참정권획득을 위한 운동기간이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48년 7월 헌법 제정 때까지의 짧은 기간이라는 데서 찾기도 한다. 19세기 말 이해 한국여성의 정치 · 사회 참여운동은 개회기 및 일제 치하의 사회적 여건과 민족적 요청으로 인한 구국운동(救國運動)이나 독립운동과 같은

5) 한국여성의 참정권은 1948년 7월 17일에 선포된 헌법에 기초하여 남녀 동등한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및 정당가입권을 부여한 남녀평등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애국운동으로 시작(이효재 1989: 112)[6]되었기 때문에 서구에서처럼 여성의 인권이나 민원을 주장하는 운동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1948년 민주헌정 수립과 함께 보장된 여성의 참정권은 쟁취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출발한 서구의 여성참정권 운동이 법적 보장을 받아 여성이 정치에 평등한 시민으로서 참가할 수 있을 때까지 1세기 반 이상의 오랜 투쟁의 결과라고 할 때, 한국여성의 참정권 운동은 그 투쟁 기간이 너무 짧아 여성 스스로의 피나는 노력 없이 얻어진 참정권이므로 주권행사 면에서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부족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으나 그것은 일반론에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다(백경남 1981: 112-113). 즉, 우리나라 여성의 참정권을 위한 여성운동은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19세기 인족주체의식에 입각하여 반(反)침략과 반봉건의 기치아래서 민중으로 하여금 자유, 평등, 인간의 존중 사상을 각성케 한 동학사상과 자주, 민권, 자강사상을 주도한 독립협회의 운동은 근대를 지향하는 한국여성의 자각을 촉진하였다(백경남 1989: 115). 이로써 한국 여성운동은 교육의 보급에서 출발하여 교육을 통한 남녀동등권이 주장되면서 여성교육의 중요성과 여성의 정치·사회 참여가 역설되기 시작하였다.

1898년 한국 최초의 여성단체인 찬양회가 여성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면서 한국여성의 정치·사회 참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찬양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조직된 근대적인 여성단체로서 여성의 권리가 남자와

6) 1907년 전국적으로 일어나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의 참여에서 여성의 애국의식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제의 경제적인 침략과 지배에서 국권을 지키기 위한 국제보상운동에는 친일 고관부인들이 주동한 여성단체를 제외하고는 전국 각 지역에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계층의 여성들이 호응함으로써 구국운동에 평등하게 참여했다.

동등함을 의식하고 교육기회의 균등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관립여학교 설립운동을 전개하였고 근대 시민국가 형성을 위한 정치운동에까지도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박용옥 1982: 69).

1907년 국채보상운동을 통하여 구현된 여성의 정치적 단결은 항일독립운동과 계몽운동을 전국적 규모로 수행하였으나, 이후 조직적인 항일여성운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3·1운동에는 일반 여성대중을 제외하고 여학생만을 보면 서울에서 1,000명,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10,000명이 넘는 여학생이 참가하였고 장로교회 신도로서 체포된 사람 중 남성 신도가 2,125명, 여성신도가 531명이었다(백경남 1981: 116-117).

3·1운동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같이 일제시대 여성의 구국·항일독립운동에서의 역할은 해방 후 가족법 외에 정치·경제·교육상의 법적 평등권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었다. 일제가 한국민족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하여 한국민족에 대한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화하면 할수록 일반민중의 민족의식은-비록 일부 지도층의 전향풍토가 있었다 할지라도-더욱 고양되었다(백경남 1981). 결국 한국여성은 일제시대를 맞이하여 근대화의식을 고취시키고 민족사 창조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자각하게 되었다.

여성운동은 1945년 8·15해방을 계기로 하여 여권신장과 참정권획득을 위한 운동으로 이행되었다. 1945년 8월 17일 대한여자국민당이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확보를 목적으로 창당되었는데(백경남 1989), 임영신(任永信)씨가 초대 당수로 선출되는 등 여성의 정당 활동이 의욕적으로 진행된 적도 있었다.

그 후 독립촉성애국부인회 등의 많은 여성단체가 조직되었으며, 이들 단체는 법률상의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적극 가담하

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였다. 결국 한국여성의 참정권은 근대를 지향하는 한국여성의 자각과 민족의 독립을 위한 애국의식의 진작(振作) 과정에서 얻어진 산물이라 할 것이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으나 또다시 국토분단이라는 현실에 부딪혀 한국 여성운동은 다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남북간에 대립된 정치이념과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나 민족상쟁의 비극적인 동란을 겪는 동안 여성단체들은 여권운동의 성격을 확립할 수 없었다(이효재 1989).

한국 여성운동은 유교적 전통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발생한 억압과 차별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성교육계몽운동으로 시작되었다. 70년대 중반 이후 여성운동은 여성노동자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인권문제와 노동문제가 가족법개정으로 대표되는 가부장적 차별철폐의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였다. 70년대 후반부터는 진보적인 지식인 여성그룹들이 형성되어 서구 여성학 이념을 사회에 알리기 시작하였다. 80년대 여성운동은 이러한 70년대 후반의 문제의식의 계승, 발전의 선상에 서게 된다.

1980년대는 한국 여성운동이 민족 · 민주 · 통일운동과 접목되어 여성문제의 해결을 사회의 민주화와 사회변혁에서 찾았던 시기이다. 또한 여성운동이 사회변혁 운동의 한 영역으로 대중적·조직적 기반을 확대해가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진보적 사회운동단체와 연대한 여성운동이 생기면서 여성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들은 대중적으로 성장하였다. 이 시기에 여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여성운동단체들은 정부에 순응적이고 보수적이었던 과거의 여성단체와는 달리, 민족주의운동에 동참하는 여성운동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였다.

1980년대 여성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과는 달리, 주도적으로 여성정책 의제들을 제기하고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민주화 운동 과

정에서 각 계층별, 지역별로 확산되고 성장한 진보적인 여성운동은 19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결성으로 그 정점을 이루게 되었다. 이들은 분단과 자본주의 체제 내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요한 여성 억압의 근원으로 보고, 제반 사회적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한 축으로, 가부장적 차별에 따른 문제들을 다른 한 축으로 보았다. 그리고 사회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얻은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여성들의 요구를 조직화할 수 있는 전국적인 차원의 연대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하였다(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연구실 1999: 416).

아울러 여성운동 내부에서는 합법적인 법 개정이나 정책을 요구하는 운동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졌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남녀평등고용법의 제정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여성정책에 남녀평등이나 차별철폐와 같은 새로운 정책의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여성개발원(1983)이 설치되었다. 또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1983), 정무장관 제2실(1988)등이 설립되어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기구의 위상이 높아졌다.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국내 정치경제의 변화는 사회운동과 여성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여성'이 '여성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성격이 다른 여러 여성단체들 간에 '여성연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들이 여성운동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결성되고 한국여성의 전화도 크게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여성교육, 평화, 성매매문제, 종교 내 여성인권문제 등 다양한 부문의 이슈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1992: 204-205).

따라서 여성운동은 추상적 이념운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과 결합한 운동으로, 소수 활동가 중심에서 여성대중의 조직화 모색으로 이슈 중심의 과제별 운동에서 지역운동을 통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로, 그리고 선전

중심의 활동에서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정부에 요구하는 제도적 투쟁으로 새로운 이념과 운동방식을 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여성운동은 바로 생활상에서 나타나는 여성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인 운동 속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무엇보다도 여성과 관련된 각종 법률이 대량으로 제·개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여성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체계화됐다. 1995년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안에 여성 정책소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98년에는 대통력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2001년에는 여성부가 중앙부처로 신설되었다.

1990년대 여성운동은 전문화되면서 운동의 주체 및 이슈 영역의 다양화를 통해 대중성이 강화되었다. 한국의 여성운동에 있어서 주체와 이슈 영역의 다양성, 그리고 여성문제를 보는 시각과 관점은 1990년대 이후에 와서야 서구 여성운동에 접근하게 되었으며, 여성 이슈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의 세계적·국제적인 연대의 가능성 역시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법·제도 개선운동의 성공적인 전개를 통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그 어느 시기보다 질적·양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보 및 정치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보를 목표로 1994년 8월 31일 결성된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 23개 단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7개 단체, 여성유권자연맹, 여성정치연구소 등 총 56개 여성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여성연대는 여성할당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거나 '정치개혁을 위한 여성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여성단체의 연대활동으로는 여성정치지도자 교육사업을 여성단체들이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여성정치네트워크(한국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

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등이 있다(심영희 2000; 101-104).

최근 한국 여성운동의 관심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가족생활이 변화를 일으켜,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많은 기회를 허락하고 있지만, 진정한 평등한 인간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돌려지고 있다(이효재 1989). 여성들의 정치·사회 참여가 사회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제약받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이 사회에서 당연히 남성들이 해야 하는 주요 업무영역 중의 하나가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하고 국민을 다스리는 정치부분이며, 여성들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전담하게 되는 것”(한국여성개발원 1993: 21)이란 인식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결국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함께 책임지며 평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구조에 내재화되어 있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만 한다(이범준외 1998: 206)는 주장이 있다.

Ⅳ 미국과 한국의 여성정치참여 현황과 문제점

1. 미국의 여성정치참여 현황과 문제점

1960년대말에 미국에서 여성들에 의해 전개되었던 운동은 1970년대 미국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유권자들의 여성후보들에 대한 태도는 더 호의적이 되었고 여성정책들에 대해서도 지지를 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정당내의 지위를 요구했고 여성후보들을 위해 조직을 만들었다.

미국에 있어서 여성들이 연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기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다. 연방의회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1975년 3.7%, 1987년 5.3%, 1991년에는 5.8%였다. 미국 여성의 정치참여의 전환점이 되는 1992년에 여성들이 연방공화당 의회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은 그동안의 주정부에서 쌓은 경험과 출마와 통치에 필요한 기술과 선거자금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거구의 재조정과 의원들의 은퇴로 인해 현직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선거구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었다(최성재 2005). 미국의 1992년은 '여성의 해'로 불릴 만큼 여성들에게 발전이 있었는데 선거결과 연방하원은 48명의 여성의원(10%)을 갖게 되었고 연방상원은 7명의 여성의원(전체의 7%)을 갖게 되었다. 그 이후 완만한 증가를 보여 2002년에는 하원 정원 435명중 14.2%를 차지하는 62명에 이르게 되었다.

제108대 의회 회기 중인 2004년 당시 미국의회에는 하원에 60명(공화당 21명, 민주당 39명), 상원에 14명(공화당 5명, 민주당 9명)의 여성 의원들이 활약하고 있었다. 정당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양원을 망라하여 민주당 여성의원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의원에 대한 비중으로 보면 여성의원들은 하원의 경우 435명 가운데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원의 경우 100명 가운데 14%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서 미국의회의 여성의원들의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7)]

하원의 경우 미국 전체 50개 주의 절반을 겨우 넘는 26개 주에서 여성의원들이 배출되었으며, 이 가운데 유색인종에 해당하는 하원의원은 18명이다. 지난 제107대 의회에서 봉직하고 있었던 59명의 여성 하원의원 가운데(1명 사망) 3명은 출마하지 않았으며, 출마한 의원 중 4명 가운데 각각 2명은 예비선거와 총선거에서 패배하였다. 나머지 51명(공화당 16명, 민주당 35명)은 모두 재선에 성공하여 여성의원의 재선율 역시 현직의원이 보여주는 높은 평균 재선율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91%). 1987년에 특별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 의원인 Nancy Pelosi의원은 108대 하원선거의 패배를 칙임지고 당 지도부를 사퇴한 Richard Gephardt의원의 뒤를 이어 민주당 지도자를 역임하고 있어, 의회 사상 최상위직에 오른 여성의원으로 기록되고 있다.

상원의 경우 14명의 여성의원 가운데 2002년의 108대 의회 선거를 통해 초선의원으로 등원한 의원은 Elizabeth Dole의원뿐이며, Susan

7) 2006년 7월 31일 현재 세계 각국의 여성의원 평균 비율(하원이나 단원제 의회의 경우)은 16.8%로 나타나 있는 반면, 미국은 15.2%로 나타나 있어 세계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13.4%)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45.3%), 벨기에(34.7%), 독일(31.8%), 오스트리아(33.9%) 등 선진 유럽국가에 비하면 미국 여성의원의 비율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미국과 동일한 방식인 단순다수제에 의해 하원의원을 선발하는 캐나다(20.8%)와 영국(19.7%)에 비교해 보아도 미국하원의 여성의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www.ipu.org/wmn-e/world.htm

Collins와 Mary Landrieu의원은 현역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사례에 해당된다. 그 외의 의원들은 107대 의회 이전의 정규 의회선거나 주지사 등에 의한 임명 혹은 특별선거를 통해서 등원하였다. 여성의원들이 상원에 진출한 사례는 1922년 임명의 절차를 거쳐 단 하루 동안 상원의원을 지낸 Rebecca Latimer Felton 의원이 최초이며, 이후 지금까지 단 33명의 여성만이 상원의원을 역임하고 있다. 따라서 상원이 경우 여성의원의 진출은 드문 것임을 알 수 있다.

전체 여성의원들의 비율(및 여성 후보자 전체의 비율)은 199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원의 경우 여성의원의 숫자(및 여성후보자의 숫자)는 1992년 103대 선거를 통해 급격히 증가하여 그 이후 103대 의회선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주도한 것은 공화당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이었다. 특히 하원의 경우 하원선거 전체의 특색과 마찬가지로 여성의원의 경우도 현직의원의 이점은 상당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 1974년부터 2002년까지 6차례의 선거(1978. 1982, 1992, 1996, 2002년 선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여성 하원의원은 모두 의정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에 충분할 만큼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하원만큼 현저하지도 않고 또한 약간의 기복은 있으나 상원의 경우도 1992년 이후(후보자만을 보면 198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의원의 당선율(및 여성 후보들의 숫자)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직의원의 재선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검토의 대상이 되는 기간 가운데 최초로 현직 의원이 재선에 도전한 1984년 선거 이후 현직의원이 재선에 실패한 경우는 각각 1명씩 단 세 차례(1986, 1998, 2002년)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여성의 정치참여가 점진적인 발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에서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여성들의 낮은 정치참여 수준의 원인이 되는 원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여성 후보자에 대한 통념 혹은 정형화 경향(stereotyping)으로서 미국 의회선거에서 여성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편견은 여성 후보자들은 정치적 경험 혹은 전문성이 불리하다는 인식이다. 일반적으로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정치적 경험 부족은 강력한 후보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의 예외가 아니듯이 통상 각 정당의 후보자들은 다양한 정치적 경험을 축적한 후에야 비로소 경쟁력 있는 후보로서 인정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정치적 경험이 후보자들의 선거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선거전에 임하는 후보들의 정치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경험은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신뢰감을 갖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거에서 승리하여 의원으로 당선 된 이후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은 후보자들의 능력(competence)에 대한 평가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 경험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의회에서 여성의원들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이유와 관련하여 흔하게 제기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여성 후보자들이 선거전을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전개하지 못한다는 점인데, 이와 관련되어 논의되는 여성 후보자들의 약점은 바로 이들에게 정치적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다는 점이다. 정치적 경험의 결여는 곧 여성의 공직수행 능력과 조직적인 선거전을 치를 능력의 결핍을 의미한다.

미국의 경우 여성 후보자들의 원내진출이 부진한 점에 대한 설명은 다

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여성의 공직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유권자들의 편견, 여성의 선거운동 수행능력의 부족, 여성의 여성성과 관련된 문제 등이 여성의 원내진출을 방해한 요인들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요소들이 의회선거의 역사적 추세에서 볼 때 전통적으로 여성들로 하여금 공직 후보출마 결정을 좌절시키거나, 출마 결정 이후 여성 후보자들의 선거전을 어렵게 한 요인들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1990년대 이후 원내에 진출한 여성의원들의 정치적 경력을 분석해 보거나 여성 후보자들이 수행한 선거전 양성을 검토해 보면 위에 지적된 요인만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여성 대표성의 문제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여성 후보자들의 취약점으로 거론되는 선거운동의 측면에서도 여성들은 최근 남성들과 같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선거전을 수행하고 있음도 이미 논의되었다. 아울러 여성의원들의 여성성 역시 적극적인 선거운동과 결합할 경우 여성 후보자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 커다란 자산이 될 수 있다.

선거운동이나 정치적 경력의 측면에서 여성 후보자들이 남성 후보자들에 비해서 열등하지 않다면, 낮은 여성 대표성 수준, 즉 여성의원들의 원내 진출이 지연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흥미로운 의문으로 제기된다. 이러한 사실을 유도한 여러 요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첫째, 현직의원 이점이 매우 높아서 현직의원이 도전자에 의해서 패배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사실과 둘째, 현직의원을 난공불락의 존재로 만들어 준 현직의원의 이점은 대부분 남성의원들에 의해서 향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직의원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현실과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들은 감안할 때 여성 후보자들이 현직의원에 도전하여 의원직을 쟁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남성의원들로 대부분 구성된

현직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이점 -인지도의 우월성, 선거자금 동원능력의 우월성, 지역구 민원사업을 통한 지지자 확보,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영향력 등- 은 여성 도전자들의 의원직 쟁취를 지극히 어렵게 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민주당이 현직의원의 이점을 이용하여 하원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면서 공화당의 도전을 물리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남성의원들도 현직의원 이점을 통해 여성 후보자들의 원내진출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의회선거는 단기적으로 경제상황이나 대통령의 인기도와 같은 전국적인 조건, 장기적으로는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먼저 각 정당의 선거 후보자들이 속한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가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투표 결정요인(voting cue)이 되었고,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은 단기적으로는 잘 변화하지 않는 요소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의회선거가 치러지는 그 해의 정치, 경제적 조건 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졌다. 경제상황이 개선되거나 대통령의 인기도가 상승하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후보들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인식이 수정된 계기는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 약화, 독립 유권자의 증가 및 현직의원의 이점의 위력이었다. 의회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꾸준히 승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공화당 대통령이 등장하는 현상을 단지 대통령 선거 당시의 경제상황이나 현직 대통령의 인기도 등의 요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반성이 등장하였다. 이렇게 볼 때 1960년대 이후 꾸준히 공화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의회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현직의원의 이점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1994년 선거에서 의회, 특히 하원을 장기간 지배했던 민주당이 양원

다수당의 지위를 공화당에 내어 주면서 현직의원의 이점에 관한 논의는 잠시 중단된 듯했다. 40년 만에 발생한 공화당의 하원 탈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직의원의 대거 패배현상은 현직의원의 이점을 중심으로 선거결과를 분석할 수 없게 만든 주요 논거가 되었다. 대신 남부의 공화당화와 함께 진행된 유권자들(특히 백인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의 변화와 이와 관련한 클린턴의 정책에 결정적으로 불만을 품은 기존 민주당 유권자들의 이탈,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 편승한 공화당의 적극적인 선거전략과 양질의 후보자 충원 등이 1994년 공화당 승리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1994년 선거 이후 지속된 공화당의 하원 지배현상은 현직의원의 이점이 여전히 선거결과의 설명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환기시켜 준다. 다시 말해 미국 의회선거, 특히 전국적인 영향력이 적은 하원선거의 경우 장기적인 유권자들의 투표결정 요소로서 정당 일체감과 함께, 구조적인 요소로서 현직의원의 이점은 오늘날에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선거에 임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단기적으로 투표결정에 영향을 줄만한 현저한 이슈가 존재하지 않고 각 당의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유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당일체감과 유권자가 거주하는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현직의원 여부가 가장 중요한 투표 결정요인(voting cue)이 된다는 점에는 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미국 의회선거와 관련하여 1978년부터 2002년까지의 현직의원의 선거참여 결과를 살펴보면 현직의원은 도전자가 극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존재임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재선 현직의원 비율”과 “예비선거 재승리 현직의원 비율”은 모두 90%를 상회하는 결과여서 현직의원의 이점이 선거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선 현직의원의

비율은 1986년과 1998년 최고 98.5%에 이르렀으며, 예비선거 재승리 현직의원의 비율은 거의 100%에 이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현직의원이라는 이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실제로 도전자가 예비선거나 총선거에 임하여 경쟁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도전자의 선거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미국 의회선거 상황에서 절대다수가 남성의원들로 구성된 현직의원들에 대해 여성 후보자가 도전하여 당선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로 보이며 여성 의원들의 원내 진출은 이로 인해 지체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직의원의 이익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여성의원의 진출이 향후 현저히 증가할 가능성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성의 원내 진출에 대한 근본적인 장애는 현직의원의 대부분이 남성이라는 점에서도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특히 강화된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여전히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현직의원의 이점을 극복하면서 도전자가 의원직을 쟁취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고, 여성 후보자들은 남성지배, 현직의원 그 외의 다양한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이와 같이 구조화된 선거에서 싸워야 한다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한국의 여성정치참여 현황과 문제점

1945년 해방 이후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가치관과 행태도 많은 변화를 보여 왔다. 그 동안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상당히 개선되어 왔다고 하지만,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은 아직

도 '가장 큰 소수집단'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당히 신장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독 정치 분야에서는 여성의 참여가 부진하다. 사회·경제적 발전과 여성의 지위 및 역할의 상관성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담론이다. 즉,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에게 더욱 투자하고, 여성을 사회 모든 분야에서 주류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낮은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의 HDR(Human Development Report)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인간개발지수(HDI-Human Development Index)는 교육수준(문맹률),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우리나라의 인간개발지수는 세계평균을 넘는 수준으로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 또한 여성개발지수(GDI-Gender Development Index) 역시 남녀분리통계에 따른 교육수준, 평균수명, 국민소득, 문자해독률 등에 의거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세계상위권 수준에 속한다. 여성권한척도(GEM-Gender Empowerment Measure)는 여성 국회의원 수, 행정관리직 및 전문기술직에 있어 여성의 비율, 남녀소득격차 등에 의거하여 여성의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하며, 남녀평등지수와 달리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정도를 평가한다.

UNDP가 발표한 3가지 지표들을 비교해 볼 때, 한국여성의 교육수준은 남성과 대등할 정도로 높아졌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무원, 관리직, 전문직 등 정치·경제 분야에 진출한 여성들의 비율은 낮다. 남녀간의 소득격차가 크기 때문에 여성개발지수(GDI)에서는 앞서 있으나, 여성권한척도(GEM)에서는 하위권을 맴돌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한국의 GEM이 낮은 것은 정치참여, 특히 의사결정직에서의 여성참여가 저조하

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성권한척도(GEM)의 상위권 국가들의 경우, 여성의원 비율이 노르웨이(36.4%), 호주(26.5%), 스웨덴(45.3%), 네덜란드(35.1%)[8]에 비해 우리나라 여성의원은 13.5%에 불과하다.[9] 이처럼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권한척도가 낮은 것은 첫째,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온 보수적 사회문화로 인하여 여성들은 정치사회화의 기회가 적었으며, 이로 인하여 여성 스스로 정치참여에 소극적이어서 국회 및 지방의회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여성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둘째, 입후보의 의지를 가진 여성의 경우에도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공천권자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당선가능성의 불충분으로 당의 공천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셋째, 구조적 장애요인으로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제도에는 사회적 약자집단인 여성이 그 대표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미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낮은 정치적 지위는, 정치는 남자의 영역이고, 오랫동안 남성이 만든 정치rule은 여전히 강하고,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정책적으로 진지한 고려사항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과 협력으로 지난 몇 년간 여성정치참여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후보에 있어 여성공천할당 30%를 정당법에 명문화하였고, 2002년 3월 제3차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광역의회의 비례대표에 여성공천할당 50%와 지역구 대표에 여성공천할당 30%제를 「정당법」31조에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성공천할당을 정당법과 정당의 당헌·당규에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8)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4

9)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6

강제할 수단이 없었던 까닭에 정당들은 당초 명시한 여성공천할당제의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또한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당들이 경선제를 실시하면서 경선제와 여성할당제와 연계한 조치를 미리 마련하지 못했던 탓에 많은 여성후보들이 공천과정에서 남성중심의 정치 벽을 뚫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었다.

17대 국회에 들어와서야 각 정당이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여성국회의원의 수는 괄목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16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11명, 지역구 5명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9%였는데, 17대 총선을 통해서 전체 299석 가운데 여성의원이 13%인 39석을 차지했다.

역대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수는 제헌국회 이후 9대 국회를 제외하고는 줄곧 한자리 숫자를 맴돌았다. 우먼파워가 돋보였다고 할 수 있는 1990년 15대 총선에서도 9명(3%)에 그쳤으며, 16대에 와서야 16명(5.9%)으로 15대의 두 배 수준을 기록하면서 신장해오다가 17대국회에서는 13%라는 두 자리 숫자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의 문제점을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가부장적 사회인식, 여성인력의 부족, 선거·정치제도 등에서 찾고자 한다.

첫째, 여성의 정치참여에서의 과소 대표성은 공급 부족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정치참여를 원하거나 정치영역에 적합한 역량을 가진 여성이 적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는 유교적 가부장적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유교에서 여성의 위치는 사적인 영역에 제한되어 있고, 정치는 국가중대사를 다루는 일로 남성 고유의 영역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남성들뿐 아니라 여성들도 정치는 남성의 일이라고 인식하여왔다. 사회가 근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치의 장에서 이러한 가부장적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여성들의 정치로의 접근을 막고 있다(강경희외 2005:

101).

특히, 정책결정의 측면에서 여성이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사회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왔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연히 정책결정면에서 여성을 격리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정책결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요구한다. 실제로 남성은 교육을 통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길러왔지만, 여성은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정책결정에의 참여의 한계를 보여주게 되었다(장공자외 1998: 139). 투표행위에 있어서 후보자의 선택은 남편이나 아버지 등 여성 본인을 지배하는 중심부에 따라 결정되어지게 되었고, 선택에 있어서도 언제나 주변화 되고 있다. 이러한 주변화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파생된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들의 정치참여 뿐만 아니라 폭넓은 사회관계 형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송선희 1986: 258). 이러한 고정관념은 태어나면서부터의 정치사회화[10]과정으로 더욱 고착화되었다. 가정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따로 식사를 하고, 중요 사항의 결정권은 아버지에게서 장남에게로 전수되어왔다. 고등교육의 기회도 남성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졌다. 어머니는 양육과정에서 끊임없이 여성의 종속적 위치를 인식시켰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여자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호강하며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하면서 딸을 양육한 것이 그 예이다. 물론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자신들에 대한 억압을 묵인하고 그 억압이 유지되도록 하는 도구일 뿐인가"라는 질문이 제기 될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여성 정치학자인

10) 정치사회화란 한 세대의 정치적 신념과 기준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방식, 또는 사회 구성원이 그 사회에서의 정치적 태도와 행동양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사회의 정치문화는 교육되고 전수될 정치 규범과 가치를 결정함으로써 정치사회화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사회화는 사회구성원의 교육과 학습과정을 의미하므로, 이 과정을 통해 정치문화에 영향을 미친다(강경희외 2005: 82-83). 그러므로 정치문화는 자연스럽게 여성지배적인, 그리고 남성중심적인 정치사회화 과정 속에 여성을 위치시킨다. 가정과 또래 집단, 학교에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은 극명하게 분리되었고, 여성에게는 남성과는 판이하게 다른 가치들이 요구되었다.

Virginia Sapiro는 이것을 여성들의 일종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지적한다. 여성들은 남성 지배구조가 워낙 견고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기보다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딸에게 전수하는 사회회의 내용은 어쩌면 견고한 남성 지배구조에 절망한 어머니들의 가능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강경희외 2005: 83).

성역할 고정관념 타파에 앞장서야 할 학교 교육에서조차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오늘날의 교육현실 역시 여성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공교육에서도 반장이나 회장 등과 같은 대표의 자리는 항상 남자의 몫으로 인식되었다. 또 대학 진학을 위한 전공의 선택에 있어서도 여성들은 주로 간호학, 가정학, 어문학 및 사범계 학과가 권장된 반면, 법정계열이나 경상계열의 학과는 마치 여성이 진학하는 과가 아닌 것으로 그동안 인식되어왔다(강경희외 2005: 101-103).

대중매체 역시 가정교육 및 학교교육과 더불어 여성의 정치참여를 저해하는 역할에 일조를 한다고 본다. 다른 어느 매체보다 대중매체는 전달 및 상징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심각성을 지적할 수 가 있다. 여성의 역할과 관련하여 대중매체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상품광고에서 소비의 주체를 여성으로 부각시키고, 생산의 주체를 남성으로 부각시키는 광고는 그 좋은 예이다. 한편, 드라마에서조차도 비유되어지는 여성의 직업은 대부분이 서비스직이나 단순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설사 정치인이나 전문직업인으로 등장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묘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와 같은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의 성차별적인 여성역할 반영은 정치참여에 대한 여성의 참여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송선희 1986: 258).

이러한 정치사회화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여성들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정치를 마치 남성의 전유물로 인식하게 만든 측면이 적지 않다. 하지만 사회의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정치를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입장에서도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여성 스스로의 낮은 정치참여 의식이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앞서 가부장적 사회인식으로 인한 겉으로 보이지 않는 남녀간의 차별구조를 살펴보았다. 이런 차별구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여성이 개인적으로 혼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이러한 차별구조를 없애기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동안의 여성의 정치참여는 소수의 엘리트 여성을 중심으로 되어 왔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권력의 중심에 서지도 못했으며, 여성 의원수를 양적으로 늘리는데도 실패했다. 남성중심주의 사회에서 소수의 집단적인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즉, 여성 자신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태도·능력부족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정치는 당연히 남자들이 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한정신외 1993: 178). 사회변동의 추세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별다르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음은 여성 스스로의 의식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들이 남편과 자녀에 대한 전통적인 의존성을 지녀 심리적으로는 독립하지 못하고 살림살이 등에 파묻혀 주부들 자신의 존재가치가 사회적 성취를 남편과 자식들에 의하여 보상받으려는 경향이다(김경애 2001: 15-16).

여성은 정치에 관심이 적고 정치적 의견과 여론조성의 힘이 약하며 정치적 정보와의 접촉이 늦거나 빈약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한 나라의 유

권자의 반(半)수를 점하고 있으며 막대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참여에 있어서 열세에 있는 것은 공적인 문제에 관심이 적고 일을 추진해 나갈 조직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는 남녀 의원들의 정치활동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한국의 여성의원의 경우 당면하는 제약과 한계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성의원은 사회관계망이 극히 협소하여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남성의원들은 여성의원들과는 달리 동창조직, 혈연 및 지연, 지인과의 연고관계 등이 강해서 국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회 밖에서도 광범위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어서 유사시에는 그 관계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나종천 2002). 특히 정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치권 진입의 통로라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제약은 더더욱 여성 후보의 발굴을 어렵게 한다.

두 번째로는 여성엘리트의 충원 부족 문제를 들 수 있다. 여성들이 정치에 보다 많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후보로 나설 여성 엘리트들이 많아야 한다. 여성 엘리트란 첫째,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아야 하며, 둘째, 보다 우월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남성들과의 경쟁을 마다하지 않을 용기가 있어야 하고, 셋째, 유권자들이 공직을 맡기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느낄만한 능력을 구비하여야 하며, 넷째, 현실적으로 선거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 수준의 재력이 있어야 하는 등 만만치 않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선용상 2004: 41-42).

따라서 국회의원의 경우, 큰 고생 없이 당선이 가능한 유력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제외하고는 여성이 지역구 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지역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여

성의 입장에서 거의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 패권정당의 공천을 받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훌륭한 사회적 배경을 지닌 여성들이 정치일선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기초의회 의원에 입후보하여 지역에 봉사하는 일은 그다지 명예스러운 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없지 않다.

실제로 주요 정당의 경우에도 지구당 위원장들이 여성 기초의원을 공천하기 위해 능력 있는 여성분과위원장이나 활동장을 발탁하려고 해도 인물난에 봉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 지구당 위원장은 불가피하게 자기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사들로 충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선용상 2004: 42-43). 또 최근 몇 년간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여성의 사회참여도 저조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여성의 사회참여에서 기초가 되는 대학졸업 여학생의 사회진출 양상도 자기계발 가능성이 높은 분야보다는 안정된 직장을 찾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학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정당 및 시민단체에 진출하여 인턴과정을 거친 후 사회적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로 진출하려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에, 우선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무원 시험 등에 매달리는 경향이 훨씬 많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에 진출해 있는 여성에 대해 제 역할을 부여하고 그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들이 자아실현과 자기계발을 도모할 수 있는 분야로 진출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를 이끌고 나갈 분야에 여성의 충원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한 기대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의 제고는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세 번째로는 선거제도와 고비용의 선거풍토를 들 수 있다. 현재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한 지역구당 가장 득표가 많은 한 명을 선출하는 다수대표제로, 유권자들은 '가장 모범적인 남성'을 뽑는 관습을 가지고 있어 여성이나 신인의 진출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한다. 이는 각국의 선거제도와 의회에서의 여성 참여율을 비교해 보면 명확하게 나타난다.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북유럽의 국가들이나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독일 등에서 여성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 영국의 여성 참여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으나, 비례대표직의 비율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여전히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에서는 다수의 후보자가 등장하여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므로 여성 후보자를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백영옥 1998: 68-72).

또한 선거 시 정치자금에 있어서도 여성들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반적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좋은 이미지와 조직, 그리고 선거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돈이 많이 드는 한국의 선거 풍토에서 선거자금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 지역구 의원의 경우, 선거는 물론이고 정당활동을 하거나 지역구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경제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조현옥 2003: 27).

여성은 자금 동원력이 남성보다 약하고 사적인 채널을 통해 정치자금 및 선거자금의 조달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거자금 조달의 제약은 여성들에게 정치 참여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 후보들은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남편이나 가족, 친척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선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며, 조달하더라도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입문을 어렵게 한다. 실제로 15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18명의 여성후보들에게 낙선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9명이 '자금부족'을 그 이유로 꼽아 여성후보들이 자금동원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보여 주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98: 47). 이러한 고비용의 선거구조하에서 당연히 출마하려는 여성후보가 적을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의 의회진출이 저조한 이유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공직에 진출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은 여성의 정치입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치비용이 높아지는 문제는 정치자금법, 기탁금, 후원금, 당비의 운영과 상당부문 관련이 있다. 의석수비율로 배분되는 이러한 거액의 국고보조금은 거대 정당의 유지를 도와주고 신생 정당의 창출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 이겨야 한다는 선거의 맹목적인 호전성을 부추기기도 한다. 대의정치의 기능상,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에 대한 보조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액수와 배분기준은 마땅히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당비 역시 대체로 개별당원이 납부한 것이 아니라, 당 간부와 의원들이 매월 할당된 금액을 납부하는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당의 성격을 떠나, 의원 개인을 후원하는 후원회의 다양한 모금방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현재의 우리나라 정당은 풀뿌리 힘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 인물 중심의 정당운영이 되어간다고 할 수 있다.

Ⅴ 여권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제약요인들의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장기적인 시각에서 시도해야 하는 것은 의식의 전환이다. 의식전환은 여성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나아가서는 여성들에게 정치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을 말한다. 본 장에서는 단기간에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법을 여권론의 관점에서 찾고자 한다.

1. 자유주의 여권론

자유주의 여권론은 개인의 자율성과 자아실현이라는 전통적 자유주의에 근원을 둔 이론이다. 자유주의 여권론은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인식과 발상에 맞춰 여성 역시 이성적 존재임을 강조하려 했다. 여성에게도 똑같은 교육과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성적 존재로서 잠재력을 구현할 수 있고 여성차별의 관행이나 제도는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것이며 관습과 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면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

는 자유주의 여권론의 관점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여성 유권자의 의식개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성 유권자의 의식전환 교육에는 우선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차원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정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 다음 필요한 교육은 선거에서 후보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키워내는 교육이다. 자원봉사자 교육은 민주주의의 선거의 근간으로서 선거 자원봉사자의 필요성과 역할, 기능 등을 내용으로 한다. 세 번째는 여성후보와 참모를 길러내는 교육이다. 후보자의 기본적인 정치적 소양뿐만 아니라 연설기법, 이미지 창출, 기획 등 정치 후보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법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불합리하고 후진적인 정치문화와 선거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현재 시민사회와 각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시민교육, 여성의 정치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는 정당 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하며 제도적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대부분 프로그램이 전문화 되어 있지 않고, 일회성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교육내실화를 위하여 교육방법에 있어 피교육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교육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은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에 의한 학습방법을 탈피하여 참가자의 의견발표와 상호간의 의사소통, 직접 실습과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참가자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참여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치에 참여하라'가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환경문제, 교육문제, 교통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구체적 행동지침을 실행하도록 하는 교육'으

로 바뀌어야 한다. 또 지역별로 관련 전문분야의 전공별 강사은행을 구성하고, 강사들이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교육관련 정보와 지식을 교환, 교류할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여성의 정치지도력 향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및 사회교육기관의 진행자와 강사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여 여성정치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후속 프로그램도 개발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사회주의 여권론

젠더의 특성이 사회 · 경제 및 정치적 범주 내에서 어떻게 발달되고 지속되어 왔는지를 설명하는 사회주의 여권론은 기존의 사회제도 점진적으로 여성을 포함시키는 방식을 취하는 자유주의 여권론에 비해 좀 더 급진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여권론자들은 여성 억압의 원인으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제시한다. 그 결과 남성이 여성의 희생을 대가로 하여 특권을 누린다고 주장한다. 즉 현재 여성의 지위가 자본주의 체제 유지에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남성위주의 이념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사회계급과 연관되어 강화되는 측면을 설명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구별하지만 서로 연관되는 체제로 보고 그 같은 이중적 접근법이 사회주의 여권론의 패러다임을 형성한다고 본다. 따라서 여성억압의 근본적인 원인을 생물학적 재생산보다는 사회의 물질적이고 사회제도적인 재생산 조직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수혜자격을 부여하여 더 이상 성별 노동분업에 의한 여성의 종속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성에 대한 억압이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발달과 자본주의적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결합에 의해 심화되었다고 보는 이러한 사회주의 여권론자들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여성정책전략은 기본적으로 여성이 전형적인 사회적 재생산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사회보장 분야에서 여성에게 독립적이고도 남성과 동등한 수혜자격을 부여한다든지, 남성과 여성, 아동으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가족형태를 전제로 한 복지혜택을 비전통적인 편모, 편부, 독신가정에게로 확대한다든지, 출산이나 아동, 장애인, 노인을 보살피는 것에 대한 휴가나 금전적 복지혜택을 남성에게도 확대한다든지 또는 양육의 사회화를 실시하여 가족 양육 부담이 여성의 신체적 특성에 연계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설명 될 수 있다.

3. 급진주의 여권론

급진주의 여권론은 사회주의 여권론과 마찬가지로 성차별이 사회제도 내에서 체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가부장제를 여성억압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사회주의 여권론과의 차이점이다.

급진주의 여권론은 남성이 여성의 성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고 통제를 가하는 남성우위의 가부장제와 출산을 담당하는 여성의 신체적 특성에서 여성억압의 원인을 찾고 있다. 따라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출산의 임무에서 해방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급진적 여권론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가 여성 억압의 근원이 되었으며 이와 같은 시공을 초월하는 억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신체적 불리함을 극복해야 하며 여성은 남성과 분리되어 여성들끼리 단결을 해야만 현재의 가부장제적인 사회질서를 바꾸는 혁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급진주의 여권론자들의 입장에서는 남성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보며 여성들만의 양식을 갖는 여성문화의 재창조를 통해 여성 중심적 가치를 고취하는 등 정치적 분리주의를 택하고 있다. 또한 가부장제적인 사회구조의 타파를 평등성취의 전략으로 삼으면서 기존의 남녀관계와 가족관계를 변혁하려는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남녀의 가사부담, 그리고 남성의 출산휴가 허용 등 많은 부분의 제도적 의식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뿌리내려온 우리의 남성우월적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Ⅵ 결론

정치란 사람들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나 입장에 따른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여 사회의 통합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 행위 자체가 공정한 도덕과 엄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질 때 그 결정이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성은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모성을 가진 존재로서 생명과 평화와 양육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으며, 여성의 리더십은 남성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성은 더 이상 열등하거나 남성과 통합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여성은 여성이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 남성이 간과한 문제들, 남성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동반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의 지위가 이론과 실제에서 괴리현상을 일으키는 본질적인 이유는 다양하다. 첫째, 차별적이거나 불공정한 법률이 계속 통과되고 있다. 둘째, 법률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를 준수하는 행정부의 경제적·정치적 뒷받침이 미흡하고 애매하다. 셋째, 편견이 사회구조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을 때에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압력이 없으면 여성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의 시행속도는 아주 늦다. 넷째, 종종 개인적 · 관습적 · 종교적 법률이

민법과 상충되는 수가 있는 데 행정부의 정책보다 더 비중 있는 것으로 결말지어진다. 다섯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률이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되는가 하는 것이 법률체계의 변화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데도 법률에 대한 경험적 자료가 부족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법률에 관심이 있거나 활용하게 될 대중의 여론 수렴조차 없이 진공상태에서 법률개정이 채택되어왔다는 점이다.[11] 이처럼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남성에 비하여 너무나 열악하다. 즉, 사회의 가치인 권력, 존경, 부, 명예 등에서 여성은 합당한 가치를 배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미국 여성들이 의회진출에 가장 큰 난관은 예비선거제와 높은 현직 재선율이다.[12] 예비선거제는 기본적으로 소수의 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재선율이 높다는 것은 결국 현직자의 지명도와 이미지가 선거에 많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여성의 정치참여는 스스로 지지를 넓혀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방의회 의원선거에서의 압도적인 현직자의 재선율을 들 수 있다. 2000년 하원선거에서 정원 435명중 현직의원 403명이 출마하여 394명이 당선됨으로써 97.8%의 재선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높은 재선율은 2000년만의 특징이 아니다. 1960년 이후 1992년의 88.3%를 제외하곤 90% 이하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에 반해 주행적직 선거와 주의회 선거의

11) 그 결과, 특히 개발도상국가의 많은 여성들은 법 앞에 자신들이 가진 권리에 대해 잘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절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국에서 법률이해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여성개인과 국가기구 사이를 연결해 주는 법적 하부구조의 필요성을 창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꼭 필요하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10-11).

12) 이것은 미국의회 의원들의 경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미국 상하원의원들의 경력은 주로 주의회, 또는 시의회 등 지방의회로부터 경력을 쌓아서 의원이 된 경우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경우에는 재선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높은 재선율은 여성 후보에게만 불리한 요인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결국 연방의회 의원후보자가 되기 이전에 보다 낮은 주단위 공직진출에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연방의회에 도전하는 것이 재선율이 높은 미국사회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연방의원 후보자의 주요 공급원으로서의 주의회와 법조계, 여성경제인 인력의 수가 적다는 것도 그 이유의 하나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낮은 이유의 하나가 예비선거에 의한 후보지명을 들 수 있다. 미국정당은 다른 나라의 정당과는 달리 매우 분권적이며 지역정당의 경우에도 후보지명은 당원 또는 일반 유권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치열한 예비선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여성들의 정치참여 수준이 낮은 이유중의 하나로 선거제도 역시 거론된다.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지방, 주 연방의회 의원들은 대선거구에서 선출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시, 군, 주정부 수준에서는 부분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연방의회는 1842년에 연방하원 선거에 대해 소선거구제로 변경했다. 현재 연방의원 선거는 상하원 각각 소선거구제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이러한 소선거구제는 지배집단에게는 유리하고 여성이나 소수집단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의회 의원 선거를 도시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여러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곳과 여러개의 선거구로 나누어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선거구제도의 차이에 따른 여성의 당선비율을 비교해 본 결과 대선거구제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점진적인 정책변화에 의존하

기 보다는 획기적인 제도보완을 지향해야 한다. 최근에는 각 정당들이 여성유권자를 겨냥해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정당당직에 할당제를 도입해 여성간부를 임명하는 등 정당의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여성에 대한 관심표명보다는 정당에서 여성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사실상 여성의 정치활동이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소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의 사회화과정이 여성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기제로 보고, 이에 대한 여성의 재사회화를 통한 정치의식이 변화에 주목하여야 한다. 최근 법률에 관해서는 여성의 지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이 대부분의 수많은 여성들을 계속 피해가고 있는 현상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10). 이론뿐인 평등, 실제적인 불평등이라는 표현은 법 앞의 여성평등과 사회의 실제평등 사이의 괴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다.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여성들에게 효율적으로 정치적 리더십을 갖게 하는 교육과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정계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식을 갖게 하는 교육이다. 여성들로 하여금 나도 정치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으로나 지역단위에서도 여성들은 실제 정치행동에는 소극적이다. 또한 정치의 주변세력으로 머물러 있어도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정치적 흥정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여성참여의 증진을 위해서는 의사 및 행위의 주체로서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유도하고 힘을 결집시키는 여성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여성들이 자기 표를 지키는 데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모아서 여성정치 지도자를 선출해 주거나 남녀평등정책을 지향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모아서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최근의 우리 사회의 민주화 노력과 지방자치제의 실시 등으로 정치발전과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그 동안 정치참여 분야에서 소외되어온 집단인 여성이 정치참여확대의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참고문헌■

1. 단행본

강경희외. 2005. 『여성정치학입문』서울: 들녘.

김경애. 2001. 『여성의 정치세력화와 지방자치』서울: 풀빛.

김원홍외. 2003. 『정당의 여성후보공천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한국여성개발원.

김형인외. 2003. 『미국학』서울: 살림.

김혜영외. 2001. 『해방 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향후과제』서울: 한국여성개발원.

로버트 길핀. 2004. 고현욱·강문구·김용복 옮김. 『세계정치경제론』서울: 인간사랑.

박순자. 2003. 『여성정치와 정책 비전』 서울: 풀빛.

박용옥. 1982. 『한국근대 여성사』서울: 정음사.

박재창. 2000. 『정부와 여성참여』서울: 법문사.

백경남. 1981. 『한국여성정치론』 서울: 문음사.

손봉숙. 2000. 『90년대의 여성정치 제1권, 제2권』서울: 다해출판사.

신명순. 1993. 『한국정치론』서울: 법문사.

신영숙. 1993. 『여성과 한국사회』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안티커너. 2001. 황영주·주경미·오미영 공역.『여성과 국제정치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여성사회연구소. 1999. 『새로 쓰는 여성과 한국사회』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여성문제연구소, 1978. 『여성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보고서』 서울: 여성문제연구소.
이극찬. 1999. 『정치학』서울: 법문사.
이범준·신승권. 1996. 『정치학』서울: 박영사.
이범준외. 1998. 『21세기 정치와 여성』 서울: 나남.
이영애. 1992. 『미소비교론』서울: 어문각.
이효재. 1989. 『한국의 여성운동 : 어제와 오늘』서울: 정우사
장공자외. 1998. 『새로운 정치학』서울: 인간사랑.
조은. 1996. 『절반의 경험, 절반의 목소리』서울: 미래미디어.
최명. 1981. 『비교정치학설』서울: 법문사.
한국여성개발원. 1993. 『여성 : 2000년을 향한 도전』서울: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2003. 『여성통계연보 2003-2004』서울: 한국여성개발원.
한정자. 1985. 『한국의 여성단체 활동』서울: 여성단체협의회.

2. 학위논문

고은경. 1996.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 의회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모색” 동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재순. 1995. “한국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와 여성의 지위 향상 :의회의 여성정책 결정과정 참여를 중심으로” 한양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태효. 2006.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동아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란. 1996.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 : 지방의회와 국회에서의 여성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연세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현. 2006. “호주제 폐지과정에서 나타난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 16대와 17대 국회를 중심으로” 숙명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희. 1999. “우리나라 여성정치참여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선. 2002.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저해요인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양. 1999.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철휘. 2002.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정치부패 개선의 관점에서” 한양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영. 2001. “한국여성의 정책 결정직 대표성 증진에 관한 연구” 연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효미. 1994.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연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종천. 2002. “한국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류경숙. 1995. “지방자치 시대와 여성 정치 참여” 연세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숙. 1999. “여성정책 형성과정에서 여성단체의 활동” 경북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지하. 2003. “여성의 제도정치 참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프랑스의 균등제(Parite)를 중심으로”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선용상. 2004.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제약요인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소광희. 2003.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고찰” 국민대정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동필. 2003. “영국 여성사회정치 연합의 참정권 운동 : 1903-1919” 부산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승희. 2000.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양대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혜숙. 1994.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경남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이화. 2004. “여성의 선거직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 한국과 스웨덴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북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대우. 2005.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양대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은. 2004. “양성평등의 원칙 :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여성할당제’를 중심으로” 동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미. 2000.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사회화와 TV, 인쇄매체의 역할” 서강대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희. 2000.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시대의 여성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연세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화. 2004. “여성의 지방정치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자. 1993. “한국여성의 의회진출에 관한 연구” 한양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 진. 2001.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경희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 현. 2001.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방안” 성균관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혜자. 2003. “지방자치제하에서의 여성 정치참여 확대방안연구” 연세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은이. 2003.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진은희. 2002. “한국여성의 지방정치참여확대연구 : 정치제도 중심으로” 전북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성재. 2005. “미국의회선거와 선거자금: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과 정책적 함의” 이화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승주. 2001.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정치참여 현황 분석과 인터넷 활용을 중심으로” 전북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춘희. 2005. “여성의 지역정치 참여에 관한 연구 : 기초의회 진입과정과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후나고시 노리코. 2004. “한·일 여성정치엘리트에 관한 비교연구” 연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학술논문

김영배. 1999.“여성 정치참여 확대 위한 제도개혁” 『여성』 통권376호. pp. 4-11.

김영란. 2004.“한국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복지정책의 변화 : 남녀고용평등법의 제·개정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0권 제1호 통권29호. 한국사회보장학회. pp. 27-58.

김영희. 2003.“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할당제”『인물과사상』60. 인물과사상사. pp. 72-79.

김옥렬. 1993.“한국여성의 지위” 『아세아여성연구』32.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 연구소. pp. 7-18.

김옥렬·이경숙. 1992.“한국여성의 정치참여 연구” 『아세아여성연구』31.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pp. 7-89.

김원홍. 2003.“한국여성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논집』 제14집.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pp. 37-70.

김은경. 2004.“여성의 정치세력화, 그 가능성과 딜레마 : 여성의 정치세력화 -주변을 넘어” 『여성과사회』 제15호. 한국여성연구소. pp. 275-301.

김은경. 2002.“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접근방법” 『자치행정』 통권 167호. 지방행정연구소. pp. 15-18.

김정숙. 2004.“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 : 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정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정경뉴스』 통권48호. 한국언론인연합회. pp. 72-73.

김정숙. 2003.“정치개혁과 여성” 『국회보』 통권 438호. 국회사무처. pp. 30-34.

김태운. 2000.“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3권 제1호. 한국정치정보학회. pp. 319-338.

김해자. 2001. “지방의회 여성참여 확대방안”『여성정책논집』1.1. 여성정책연구소. pp. 99-129.

남인숙. 2004. “한국 정치문화와 여성” 『현상과 인식』제28권 제3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pp. 11-30.

라미경. 2005.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 『한국거버넌스학회보』제12권 2호. 한국거버넌스학회. pp. 211-232.

문재우. 2000.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활성화”『자치공론』64. 한국자치개발연구원. pp.28-39.

박의경. 2000. “정치와 여성” 『전통과 현대』12호. 전통과현대사.

박채복. 2002.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당의 지원책: 6·13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총론』통권 제18집. 한국세계지역학회. pp. 37-54.

백경남. 1999. “여성 정치참여 확대전략”『여성』통권378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pp. 20-23.

백영옥. 1998.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14.1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163-183.

성지연. 2005. “여성의 정치세력화 : 여성의 정치참여율 증가” 『의정타임즈』. 의정타임즈. pp. 38-43.

손봉숙. 1991. “한국여성국회의원연구” 『국회저널』3.3 국회저널사. pp. 76-98.

송선희. 1986. “여성의 정치참여 행태에 대한 한국과 외국의 비교 고찰” 『여성연구』12. 한국여성개발원. pp. 219-265.

송은희. 1996. “한국 의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여성: 여성의 역대 의

회진출 현황” 『한국정치학회보』30.3 한국정치학회. pp. 61-81.
심영희. 2000.“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국회와 여성단체의 역할 : 입법화와 담론화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제19집.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pp. 89-114.
엄태석. 2002.“2002년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정치·정보연구』 제5권 제1호 통권10호. 한국정치정보학회. pp. 33-63.
이기옥. 2000.“정치의 계절에 떠오르는 생각들 : 여성의 정치참여와 할당제” 『지방자치』139. 현대사회연구소. pp. 24-27.
이대규·구태효. 2005.“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방안” 『사회과학논집』 제24집 제2호.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pp. 133-150.
이영애. 1991.“미국과 소련의 여성운동과 엘리트 여성의 정치참여” 『미소연구』5. 단국대학교 미소연구소. pp. 359-390.
이영애. 1996.“미국과 러시아의 여성정치참여 비교분석-1994년 11월 선거와 1993년 12월 선거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9. 한국세계지역협의회. pp. 113-136.
이영애. 1998.“한국의 정치발전과 여성참여: 98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8. pp. 205-225
이영애. 2002.“정부 의사결정에 여성참여 확대방안” 『자치광장』 제130호. 전북의정연구소. pp. 40-53.
이혜주. 2000.“여성의 정치참여와 성” 『여성사회교육』 제4집. 한국여성사회교육회. pp. 157-171
이현우. 2002.“여성의 정치대표성과 정당요인 : 미국과 호주의 경우” 『국제정치논총』 제42집 제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pp. 337-359.
이홍종. 2003.“선거제도 개혁과 여성의 정치참여” 『여성정책논집』 제3권. 여성정책연구소. pp. 31-41.

전경옥. 2003.“한국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한국정치학회보』37. 한국정치학회. pp. 135-158.

전정희. 2001.“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자치광장』제122호. 전북의정연구소. pp. 67-75.

조기숙. 1995.“한국유권자의 정당본위 투표”『의정연구』1. 한울, pp. 156-183.

조현옥. 2003.“여성의 정치적 역량 기르기 방법론”『여성연구논총』제4집.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pp. 23-41.

주경미. 2001.“16대 총선과 여성의 정치참여”『여성연구논집』12. 신라대학교 여성문제 연구소. pp. 129-150.

주준희. 1997.“여성정책과 여성의원의 역할”『여성과 정치』2.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pp. 89-126.

최수경. 1998.“미국과 캐나다 여성들의 정치참여”『북미주학연구』7. 충남대학교 북미주연구소. pp. 163-186.

한정신외. 1993.“여성의 정치 재사회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아세아여성연구』32.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pp. 169-212.

현종민. 1990.“한국여성 정치참여의 당면과제: 여성정치참여를 위한 바람직한 지방의원 선거법과 정치현실”『사회과학논총』8.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pp. 51-60.

현종민. 1998.“정치제도 개혁과 여성의 정치참여”『공공정책연구』4. 한국공공정책학회. pp. 131-144.

황아란. 2002.“국회의원후보의 당선경쟁력에 대한 성차(性差) 연구”『한국정치학회보』제36집 1호. 한국정치학회. pp. 203-222.

황아란. 2005.“2002년 시·도의회 비례대표선출의 변화와 특징: 여성의

정치참여를 중심으로”『지방행정연구』제19권 제1호 통권60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p. 29-53.

황영주. 2003. “영화<해피엔드>, 정치 그리고 여성” 『국제문제총론』 12. 부산외대 국제문제연구소. pp. 179-200.

4. 외국문헌

Coryell. J. L., 1998. *Superseding Gender: The Role of the Woman Politico in Antebellum Partisan Politics, Walter Prescott Webb Memorial lectures* Vol.33 No.-. A&M University Press.

Hartman, Susan M.. 1998. *Transforming women, transforming politics: The U.S. Woman Suffrage Movement, Reviews in American history* Vol.26 No.2.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Van Wienen M.. 1992. *Women's Ways in War: The Poetry and Politics of the Woman's Peace Party, 1915-1917, Modern fiction studies* Vol.38 No.3. Modern Fiction Studies.

Zhang Xianliang. 1992. *Male Suffering and Male Desire: The Politics of Reading Half of Man Is Woman by Zhang X., Harvard Contemporary China Series* Vol.- No.10. Harvard University Press.

Sidney Verba &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york: Haper and row.

Samuel P. Huntington and John M. Nelson 1977. *No Easy Choice: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Harvard University Press.

Gail Zellman, *Politics and Power* Irene H, Frienze et. al. eds. Women and Sex Role: A Social & Psychological Perspective N.Y.:W.W.Norton, 1978), pp. 336-337.

Johanna Brenner, "The Best of Times, the Worst of Times: US Feminsm Today," New Let Review No. 200(1993), p. 232.

Women in US House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 1994)

5. 인터넷자료

국회 www.assembly.go.kr

미국여성정치연구소 www.cawp.rutgers.edu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여성정치민주세력연대 www.womanpower.or.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통계청 www.nso.go.kr

한국여성개발원 www.kwdi.re.kr

한국여성정치연맹 www.womenright.or.kr

한국유권자연맹 www.womenvoters.or.kr

한국정치문화연구소 www.kiwp.or.kr